

북한의 개방 인식 변화와 신(新)자력갱생론의 등장*

이정철(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1. 개념의 전개: 북한의 자립과 개방 인식

건국 초기, 북한의 자립 개념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제3세계로서의 북한적 특수성에 적응시키는 과정에 출현했다. 이후 중소

* 필자가 사용하는 ‘신자력갱생’이라는 담론은 북한 문헌들이 언급하는 ‘오늘의 자력갱생’ 혹은 ‘1990년대의 자력갱생’을 의미한다. 최근의 북한 문헌들은 ‘오늘의 자력갱생’을 ‘현대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자력갱생’이라며 과거 1960년대식 자력갱생과는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백보흠, 『라남의 열풍』(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217쪽.

‘오늘의 자력갱생’에 대한 설명은 다음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강현재, “라남의 봉화는 새 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확고한 담보,”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3년 4호(2003), 14쪽; 길춘호,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원칙 구현,” 『경제연구』, 2005년 2호(2005), 12~13쪽.

필자는 북한 문헌에 나오는 ‘오늘의 자력갱생’론이 자립관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 변화의 내용을 추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자력갱생과 자립의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각주 5에서처럼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대체로 북한의 자력갱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자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논쟁기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일부이면서도 국민국가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자립 개념은 정치적 독립을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자립의 정치방식이 전 사회에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정책 도구의 수준을 넘어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는 최고 심급의 순수(pure) 이데올로기(Franz Schurmann, 1968: 17~57)로 진화하였다. 이제 경제는 이데올로기화된 ‘주체’의 자립론에 완전히 포섭되어 자립이야말로 발전의 주동력으로까지 묘사되었다.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결과는 선순환이 아니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 기반이 축성되자 자립 개념은 더 이상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초보적 수준을 넘어 서면 이데올로기의 동원 능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는 발전론의 기본 명제가 재확인되는 순간이었다.¹⁾

북한 지도부가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본문에서 해명할 대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든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자립의 역설²⁾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데올로기의 과도한 통제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

1) 동원체제론의 관점에서 동원 이데올로기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다룬 글은 다음과 같다.

권오윤, “북한에서의 경제발전과 정치변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동국대 대학원 연구논집』, 23권 12호(1993), 109~110쪽; Alexander Eckste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Vol. XXII, No. 4(1970), p. 488.

2) 완벽한 자립(self-reliance)이란 사실상의 고립을 의미할 따름이라는 국제사회의 현실이 확연해짐에 따라, 자립은 현실적으로뿐만 아니라 개념상으로도 폐쇄 지향성을 의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탈냉전 시대가 닥치면서 북한 체제는 지나치게 완벽해진 자립 개념이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경제를 국제사회로부터 단절시켜 고비용·비효율 체제에 머무르게 하는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 이른바 자립의 추구가 사실상 자립 경제의 물적 토대를 침식하는 ‘자립의 역설’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을 주고 있음을 시인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984년 합영법 제정, 1990년 신무역체계 선포, 1992년 나진선봉 개방, 1993년 무역 제일주의를 포함하는 3대혁명제일주의 선언³⁾ 등 일련의 개방 조치는 북한의 이 같은 인식 변화의 반증이라 하겠다.

사실 북한의 정책 변화, 특히 개방정책을 다루는 작업은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다. 북한 지도부가 실제로 개방 개념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할 뿐더러, 체제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체제에서 개방 개념이 유의미한지도 의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기득권 교체를 추구하는 새로운 이익연합(coalition)의 형성이라는 내부 동학⁴⁾을 통해 개방을 추진해 온 기타 사회주의 체제들의 개방 경험도 북한에서는 무의미하다. 설령 지도부가 개방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인민들에게 뿌리 내린 기존 자립 개념과의 관계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을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북한 체제가 겪을 혼란은 매우 클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의 지도부는 어떤 방식으로 자립과 개방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을까? 북한의 자립과 개방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점에서이다.

- 3)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농업·무역·경공업의 3대혁명제일주의 조치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염두에 두고 경제구조조정을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적 구상은 중공업 위주의 경제로부터 경공업 위주의 경제로 넘어 가야 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밝힌 현명한 구상…… 나라의 경제구조를 중공업 위주의 경제로부터 농업과 경공업 위주의 경제로 개조하며 대외무역에서 방향 전환을 할데 대한 혁명적 경제전략이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전기』,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149~148쪽.

- 4) 구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간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다음 글을 참조. Robert O. Keohane and Helen V. Milner, ed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6).

요한 갈통(J. Galtung)은 자립(self-reliance) 문제를 종속(dependency) 개념과의 연관하에서 해석했다.⁵⁾ 즉, 자립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 자립의 반대어인 종속의 어원론적 반대어를 찾아내어 자립 개념을 재해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종속(dependency)의 반대 개념으로는 독립(independence)과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양자 모두가 가능하다. 따라서 종속의 반대 의미를 지니는 ‘자립’이란 각각 자치와 평등을 대표하는 ‘독립’과 ‘상호의존’의 결합을 의미한다.⁶⁾

갈통의 해석은 북한 체제의 개방 문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정치·경제·문화적 ‘독립’과 국가 간 ‘상호의존’의 양대 구성부분으로 북한의 자립 개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후자의 부분인 상호의존 개념을 개방으로 인식할 경우 자립은 개방을 포섭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북한 체제가 자립 개념을 개방과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 같은 개념들에 입각할 때에 보다 쉽게 이해된다.⁷⁾

북한 지도부는 자립과 개방을 대립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립을 유지하면서 개방을 진행하고, 그러면서도 개방은 개혁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규정한다.⁸⁾ 독립과 상호의존의 관계 같은 개념들은

-
- 5) 요한 갈통, “자력갱생의 정치학,” 엄홍철 편저, 『종속의 극복』(서울: 풀빛, 1983), 239쪽. 역자는 갈통이 사용한 ‘self-reliance’ 개념을 자력갱생으로 번역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자립으로 해석하여 사용한다.
 - 6) 자립이란 개념은 일국적 차원에서는 사회주의 사상과 흡사하게 비치지만, 그것은 사실 사회주의 개념보다는 훨씬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즉, 인간에 대한 비전, 생산과 소비 같은 경제구조에 대한 비전, 지방조직과 중앙 정부의 관계에 대한 비전,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외교적 비전 등과 같은 것들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이념보다 훨씬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 7) 대외개방을 상호의존 개념에서 다룬 시각은 다음을 참조. 황재호, “중국의 개혁개방: 현대화의 딜레마,” 『동서연구』, 제15권 1호(2003), 192쪽.
 - 8) 이 같은 인식은 김일성의 다음 담화에 잘 나타난다.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1994년 4월 16일),” 『김일성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59쪽.

개방 문제를 자립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소위 연계(association)나 단절(dissociation)이나의 전략적 선택 문제⁹⁾로 접근한 북한 지도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물론 연계나 단절이냐는 쟁하스류의 주장이 마치 세계 사회주의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와 별개로 존재했고, 따라서 완벽한 단절이 가능했다고 보는 환상을 확산시킬 따름이라는 비판은 참고할 만하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현존 사회주의’들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의 현상, 쉽게 말하면 국가자본주의와 같은 변형일 따름이고, 따라서 단절이란 가능하지 않았고 실제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절이 가능했는가 아닌가라는 실제

“당신들이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개방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한다고 떠들어야 개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합병, 합작도 장려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투자도 허용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도 만들고 있습니다. 개방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하게 하면 그것이 개방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는 개방이 제일 훌륭한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방을 하여도 우리 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본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 9) 쟁하스(Senghaas)는 연합(association)과 단절(dissociation) 개념을 통해 북한의 자립 발전 노선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자립과 자력갱생은 단일 국가의 경제적 자급자족(autarky)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해외 무역의 연합과 단절의 연속성 위에서 선택적으로 추구될 전략적 고려 대상의 문제일 따름이다. 즉, 자립 전략은 그 자체로 고정불변의 원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과 연합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그에게 북한 같은 나라의 고립은 자립에 따른 맹목적 고립이 아니라 ‘계산된 고립’이라는 것이다. 쟁하스 저, 한상진·유필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 나남, 1995), 63~79, 269쪽.
- 10) “자본주의 세계 체제 내에서 국가소유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Georgi Arbatov and Willem, “Dependence in and Interdependent World: The Limited Possibilities of Transformation with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Immanuel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79), p. 90.

적 진실보다는 ‘단절’과 ‘연계’를 둘러싼 북한 지도부의 정책 의도, 즉 개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쿠바와 함께 북한을 기회비용을 무릅쓰고 국내 정책에 따라 세계경제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 사례라는 코헤인(Keohane)¹¹⁾이나 쟁하스류의 인식, 즉 북한 체제의 개방 문제를 체제전환이라는 단일 잣대로 보기보다는 ‘상호의존’관계의 단속적 정책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본 연구의 유용한 준거틀로 되는 이유이다.¹²⁾

요컨대 개방을 굳이 체제전환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 한, 북한의 개방 개념은 ‘상호의존’, 즉 연합의 대상에 대한 지도부의 선택 문제이자 그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2. 개방 개념의 비교 사회주의: 사회주의 발전의 도구론에서 체제전환론으로의 진화

일반적으로 개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개방 그 자체의 성격이나 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개방이 국내정치 역학 구도에 어떤 변화를 미치느냐를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개방 정책의 채택 여부나 전개 방향이 국내정치 연합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 같은 미묘

11) Robert O. Keohane and Helen V. Milner, ed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6), 김기석 외 역, 『국제화와 국내정치』(서울: 한울, 1999), 35쪽.

12) 통상적 의미의 ‘개방’ 개념, 즉 체제전환의 동의어로서의 개방 개념으로는 북한의 개방 논의를 정의하기가 마땅치 않다. 통상의 개방 개념에 따른 경우, 굳이 개방을 개혁과 별개로 다룰 이유가 없고 나아가 개혁과 별개로 진행되어 온 미묘한 대외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한 국내 역학을 다루기에는 관련 자료나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에서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서들이 있기는 하나 그마저 북한의 정치연합의 변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다루는 데에는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다.

반면 구소련이나 중국 등 구사회주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방과 국제화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많다. 이 장에서는 개방, 즉 상호의존 자체의 성격이나 영향뿐만 아니라 개방의 결정이 이들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내부 정치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들 담론들의 등장을 통해 지도부들은 어떤 정책과 제도를 관철 시켰는가를 동시에 다루고자 한다. 나아가 본격적인 체제전환기에 들어서면서 구사회주의 체제 내에 어떤 세력연합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권력투쟁과 권력재편의 양상이 어떠했는가를 비교해 볼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방, 즉 상호의존 문제는 사실상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논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레닌이 ‘일국사회주의’론을 통해 단절전략에 의한 국내자원보호와 중공업 우선주의 모델을 수립함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의 상호의존에 대한 인식은 소위 ‘스탈린 모델’로 알려진 일국적 완결성의 모델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왔다. 이는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국제 자본주의 체제의 포위를 헤쳐 나가는 데에 주목적이 있었다. 결국 국제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상호의존’은 역설적으로 생존을 위한 ‘단절’ 전략을 의미하고 있었다. 물론 일국사회주의의 단절전략을 자급자족(autarky)에 의한 불균형 전략으로¹³⁾ 반국제주의노선이라고 비판

13) Christopher Davis and Wojciech Charemza, “Introduction to models of disequilibrium and shortage model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hristopher Davis and Wojciech Charemza, eds., *Models of Disequilibrium and Shortage in Centrally Planned Economies*(London: Chapman and Hall, 1989), p. 6.

한 계속혁명론자들과의 논쟁과 투쟁이 있었지만, 대세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사회주의 국제분업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면서 상호의존의 양상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를 표방한 다수의 국민국가들이 등장하여 국제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었고 일국적 사회주의 발전 모델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었다. 다수의 국민경제체제들이 동일하게 스탈린식 발전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중공업 부문과 생산수단 부문에 대한 동시 병행적 중복 투자가 빈발하였다.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투자 효율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효용감소가 심각한 논의 주제로 부상하였다.

이 같은 반성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연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1949년 1월 소련,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6개국이 코메콘(COMECON or CMEA)을 결성하고 곧이어 알바니아와 동독이 여기에 가입하였다. 일국 차원의 사회주의 체제가 독자적인 물질 토대를 구축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제적 생산의 전문화와 협업화를 계획 기구의 틀 내에서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⁴⁾ 기존의 소극적 무역 이론에 입각한 오타르키, 즉 자급자족 유사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적 국제분업론이 현실화되어 간 것이다.

결국 이 시기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개방이란 역내 ‘상호의존’과 경제통합,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들의 통합을 위한 상호의존의 계획적 중대와 분업에 의한 역할분담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메콘 국가들

14) 퇴경연구실 편, 『현대사회주의 경제의 쟁점과 전망』(서울: 풀빛, 1991), 224~225쪽.

은 소련이 원했던 특별한 생산라인으로의 전문화와 특화를 국민국가로서의 독립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달가워하지 않았다. 보다 적절한 블록 내 무역 패턴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와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쌍무적 협력 프로그램들의 발전을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¹⁵⁾ 사실상 관세동맹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⁶⁾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서방으로 수출하는 대가로 경화신용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서방으로부터 보다 발달한 기술을 수입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대(對)자본주의 ‘상호의존’ 시대가 온 것이다. 사회주의권 내부에서의 상호의존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동서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등 데탕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과의 상호의존을 수용하는 데로 나아간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으로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개별 국민국가들의 각개약진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과의 상호의존, 즉 대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개방 과정이었다. 사회주의 국민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개념으로서의 상호의존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상으로 포괄하는 데까지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이 체제전환을 동반하는 본격적인 ‘개방’노선으로 발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1970년대 자본주의 체제와의 데탕트기를 거치면서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동구권 국가들이 대자본주의 상호의존도를 본격적으로 증대시킨 것을 필두로,¹⁷⁾ 중국이 1978

15) Paul R. Gregory and Robert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1990), 한종만·우강업·김성형 역,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경제의 구조와 전망』(서울: 열린 책들, 1992), 423~425쪽.

16) Franklyn D. Holzman, “The Significance of Soviet Subsidies to Eastern Europe,”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28, no. 1(1986), p. 54.

년 개방 노선을 전격 선언했고, 소련 역시 1985년에 가서 글라스노스트(Glasnost)로 불리는 본격적인 개방 노선을 정립하였다. 사실상 사회주의 국제분업체제의 파산이었던 것이다.

특히 그 중심에 있던 소련은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¹⁸⁾이 특히 산업의 생산성과 기술수준에 있어 거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켰음을 인식하고, 자국을 보다 완전하게 세계경제에 통합시켜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경제로부터 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발상의 전환, 즉 글라스노스트는 사회주의라는 대의에 기반을 둔 연합을 붕괴시키고 사실상 ‘이익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전환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피후견국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경제적 불만이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사태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소연방과 사회주의 체제의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 동구권 각국의 개방과 체제전환 과정은 구소련으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한 새로운 국내정치 세력들의 이익연합이 형성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였음은 물론이다.¹⁹⁾

17) 이를 더욱 촉진시킨 것은 1970년대 서방과의 교류과정에서 증대된 경화 채무(실질 이자율 상승) 위기와 추가의 신용위축에 따른 경제 압박이었다. Christopher Davis and Wojciech Charemza, “Introduction to models of disequilibrium and shortage model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hristopher Davis, and Wojciech Charemza, eds., *Models of Disequilibrium and Shortage in Centrally Planned Economies*(London: Chapman and Hall, 1989), p. 10.

18)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대외무역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련 경제는 국제경제 간 연대의 질적 변화라 할 만한 것이 없이 기본적으로 닫혀 있었다. 그것은 소련의 ‘식민적’인, 즉 원자재를 수출하고 고급기술 기계를 수입하는 특수한 무역 구조 탓이기도 했다. Nikolai Schmelev and Vladimir Popov, *The Turning Point: Revitalizing the Soviet Economy*(New York: Doubleday, 1989).

19) Matthew Evangelista, “스탈린의 보복-국제화를 가로막은 제도적 장벽,” Robert O. Keohane and Helen Miller, ed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6), 김기석 외 역, 『국제화와 국내정치』(서울: 한울, 1999), 241~247쪽.

이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적 개념으로 도입되었던 개방정책인 상호의존론이 체제전환 과정으로서의 개방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수잔 셔크(Susan Shirk)는 중국의 ‘개방’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는 달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신지도부의 적극적 의도에 따라 정치 전략적인 동기에 의해 선택된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보았다. 도를 넘어선 자급자족과 자력갱생 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자기반성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덩샤오핑이 자신의 지지 세력 연합을 결성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덩샤오핑은 개방을 통해 기존의 공산주의 제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권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 경공업, 농업, 해안지역 집단에 호소해 국제주의 연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²⁰⁾

사실 중국은 1960년대에 소련 주도의 국제사회주의 분업체제로부터 소외되면서 극도의 피포위의식에 시달리고 있었다. 중국에게는 그나마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상호의존마저도 허락되지 않던 실정이었다. 이 점에서 마오쩌둥이 1969년 중국이 모든 방향에서(소련, 인도, 일본) 적국에 포위되었다고 인식하고 “가까운 나라들과는 싸우고 먼 나라와는 타협하라”라는 속담을 거론하며 미국에 접근해서 안보를 보장하려고 했던 것은 교육지책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²¹⁾ 짧은 기간에 불과했지만 마오쩌둥의 이 같은 접근법이야말로 중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동기하에서 개방 문제를 접근하게

20) Susan Shirk, “국제화와 중국의 경제개혁,” Robert O. Keohane and Helen Miller, ed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6), 김기석 외 역, 위의 책, 263쪽.

21) Li Zhisu, *The Private Life of Chairman Mao*(New York: Random House, 1994), p. 514.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했을 때조차도 그 경제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를 강조한 것은 유의미한 분석임에 틀림없다. 특히 자신의 주장이 경쟁관계에 있는 급진파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숙청까지 당한 경험이 있는 덩샤오핑의 경력에 비추어볼 때, 전통적 공산주의 연합(중공업, 내륙지방, 군부, 중앙관료)에 의해 지지받고 있던 화궈핑 세력을 반대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개방파 연합을 활용하였다는 전략적 접근법은 더욱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Susan Shirk, 1996: 272). 물론 1992년 남순강화 시기 이후의 중국의 ‘상호의존’, 즉 신개방 노선은 러시아의 개방이 체제전환을 의미하였듯이, 체제전환의 한 구성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중국에서도 개방은 수단적 의미를 넘어 이미 불가역적인 과정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소련식이라기보다는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백학순, 2003: 56) 베트남의 경우, 개방은 조금 더 특수한 의미를 지녀, 분단국 통합의 방법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였다. 이수훈은 베트남은 도이모이를 통해 남베트남의 북화(nothernization)를 포기하고 남베트남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재통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전체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로 편입되고 있었다고 한다.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단절된 적이 없는 베트남에게 개방이라는 것은 세계체제에 대한 편입의 심화를 의미하는 담론일 따름이라는 것이다(이수훈, 1994: 105~106). 이렇게 본다면 베트남의 도이모이에 따른 개방은 이미 독립, 즉 물리적 통일을 완성한 상태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의존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개방이 분단된 국가의 통합 방법론으로도 유용했다는 분석이다.

요컨대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방 문제는 현존 사회주의의 원형(proto-

type)이었던 스탈린 체제의 자급자족 모델로부터의 탈피에서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역내 분업구조나 대자본주의 상호의존이나의 논쟁을 거치며 개방 논의는 당내 혹은 개별 국가 내 이익연합의 세력구도가 은밀히 작동하는 영역으로 되었다. 그것은 때로 개방의 문제가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의미한다.²²⁾

그러나 개별 주권국가의 권한 이양을 포함하는 세계화가 전 세계적 추세로 등장함에 따라 구사회주의 체제들의 개방 논의 역시 체제전환 경제로의 순조로운 전환 방법론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되었다. 개별 국민국가의 주권 이양을 포함하는 통합경제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어떤 산업경제도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방과 ‘상호의존’은 체제전환경제들에게도 그 자체로 목적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3. 1980년대 이후 개방 인식과 신자력갱생론의 등장 과정

1) 자립-개방의 개념사

<표 1>은 북한의 개방 정책 변화를 크게 6개 시기로 나누어보고 있다. 1950년대 후반까지를 포함하는 건국 및 사회주의 건설기의 경

22) 구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에도 개방은 국내 정책 연합의 형성을 통해 장기적인 세력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 세대가 1950년대 국제화로부터 등장한 세력들의 연합 결과이고 덩샤오핑의 개방 전략이 또한 전통적 공산주의자 연립을 반대하기 위한 갈등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Robert O. Keohane and Helen Miller, ed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6), 김기석 외 역, 『국제화와 국내정치』(서울: 한울, 1999), 335쪽.

<표 1> 북한의 자립·개방론의 변화: 독립과 상호의존의 대상 변화

		독립의 대상과 형식	상호의존의 강조 방향	키워드
1945~1960년 건국 및 건설기		- 반제 독립과 제국주의 잔재 청산 - 민주기지론에 의한 통일	- 對북방, 사회주의 진영외교	PT 국제주의
1961~1971년 중소 논쟁기		- 반제 및 對중소 독립 - '주체'의 정립과 과도적 연방 통일	- 對소, 對중, 對사회주의권의 시기별 선택적 접근, 등거리 외교	자주 자력갱생
1972~1984년 데탕트기		- 반미 및 對중소 독립 - 연방제 통일, 7·4 공동성명	- 對사회주의의 진영 - 對비동맹국 - 對서방: 75년 외채 문제 이후 후퇴	빨려볼가담 (비동맹)
사회주의 체제 전환기	1984년 합영법 후	- 친선과 자주독립 - 고려연방제 통일	- 對사회주의의 진영 - 對유류 및 對일	온 세계 자주화
	1991년 탈냉전기	- 체제 유지와 고난의 행군 - 남북 기본합의서	- 對유엔 인도적 지원 기구 및 對민간	우리 식
1998년 이후		- 김정일 '정권 독립'과 체제 전환 모색 - 남북 공존공영(6·15선언)	- 對전 방위 상호의존 - 對남	선군 및 개진, 개선

우, 대체로 반제 독립과 사회주의권과의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 사회주의 체제(서동만, 2005: 929~930) 건설에 매진한 시기이다. 8월 종파 사건을 거치면서 북한 지도부는 소련이나 중국 지도부와와의 관계에 대해 일정한 조정을 거치지만,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개방 체제, 즉 상호의존이라는 북한의 기본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물론 중국과 소련 어느 일방에 기울지 않고 사회주의 진영 외교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스탈린 사후 개인숭배 비판 운동을 진행하던 흐루시초프의 신지도부보다는 같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중국과 상황 인식이 더욱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²³⁾

23) 특히 1957년 중소 논쟁이 시작되던 그해 11월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8월 종파 사건에 개입한 것을 사과함에 따라 양자 간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다. 특히 중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58년 9월, 향후 3년간 상호

다음은 1960년대 중소 논쟁 기간에 북한이 ‘주체’를 확립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 등에 ‘선택적’으로 접근하며 사회주의 진영 외교를 강화하였다. 흔히들 등거리 외교라고 하면서 북한의 이중 태도를 비판하지만 실상 중국과 소련 양자와의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시기였다. 양자 모두로부터 공세의 대상이 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힘들게 외교적 고립과 싸웠던 시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데탕트기에는 북한이 미국을 주적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대미·대남 고립화를 추구했던 시기이다. 특히 활발한 비동맹 외교를 통해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던 때로 볼 수 있다.

1984년 합영법 발표 이후는 중국이나 소련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시작함에 따라 북한 역시 진영 외교보다는 서방과의 협력을 재개하고자 시도했던 시기이다.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진영외교를 포기하는 ‘친선’이란 개념을 확고히 한 시기이기도 하다.

1990년대는 북한에게 악몽의 시기이다. 고난의 행군을 하며 독립이나 통일보다는 체제생존 자체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가단위의 협력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선택한 것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협력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취한 이래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경제론을 재차 강조한 북한은 체제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논란을 일으킬 정도의 경제개혁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맞춰 북한의 외교는 명실 공히 전 방위를 대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물론 북핵 문제가 돌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

중요물자 공급을 약속하는 장기무역협정과 대북 차관협정을 또한 체결했다. 양자 간 무역은 현금 결제가 아니라 구상무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원조의 성격을 지녔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서는 매우 큰 부담을 지는 것이었다.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서울: 중심, 1999), 220~221쪽.

지만 이 시기의 개방 인식이 보다 전향적이었음은 분명하다.

2)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와 개방 실패의 외인론

1982년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자립경제가 국제적인 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강조한다. 자립이란 문을 닫아 매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흥세력 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²⁴⁾ 사실상 북한 체제가 기존의 자립 노선에 대해 작으나마 방향 수정을 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었다. 1978년 이후 중국이 경제개혁·개방을 실시하고 1985년에는 소련이, 1986년에는 베트남이 개혁을 선포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개방이 대세가 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북한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받아 1984년 북한은 전격적으로 합영법을 발표하였다.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무역이 중심이었다.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적은 있으나 그것은 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이었다. 그러던 북한이 합영법을 계기로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²⁵⁾

그러나 김일성은 북한이 합영법을 도입한 목적이 외자도입보다 기술도입에 있음²⁶⁾을 분명히 하였다. 기술도입이라는 게 외국자본 투자

2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25)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세계체제의 영향,”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서울: 황금알, 2004), 123쪽.

26) 김일성,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급속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1986년 2월 5~8일), 『김일성저작집』, 제3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331쪽.

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합병법 제정은 자본주의 기업들과의 합병 사업 자체보다는 본 법을 통해 대외 교류 의지가 있음을 선전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플라자 합의를 1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했으나, 합병법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3년 후, 김정일은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1987년 9월 25일)라는 그의 담화에서 현대제국주의론을 제기하였다.²⁷⁾

김정일은 이 논문에서 매우 특이한 제안을 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버리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여, 발전도상국이 경제적·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출로”라고 제안하였다. 그 결과로 방대한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을 지닌 발전도상국 경제가 발전해 나간다면,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시장 문제는 당장에 해결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제국주의, 자본주의와의 공존, 즉 상호의존이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동 담화는 바로 제국주의국가들과 발전도상국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을 만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제국주의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셈이다. 모든 것을 반제투쟁에 대한 복무 여부로 선악을 판단하던 북한 지도부의 기존 관행에 비추어보면 보기 드문 변화였다.

그로부터 5년 후 1991년 12월에는 나진 선봉을 개방한 데 이어 이

27) 스킴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240~245쪽. 동 논문은 제국주의 체계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미국을 정점으로 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한 것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제국주의론이라 불린다.

듬해 2월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정무원 결정’²⁸⁾으로 신무역체제²⁸⁾를 선언하였다. 그 내용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출 대상을 찾아내어 시장을 널리 개척하며 대외수출을 획기적으로 높일 데 대한 문제, 수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포장을 개선할 데 대한 문제, 신용제일주의 방침, 무역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무역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등과 같은 과업을 다루고 있다.²⁹⁾ 이를 계기로 무역의 중앙독점이 해체되고 개별 기업들이 대외무역에 직접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합병과 합작을 주도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이 50년 동안 강조해 온 무역의 중앙독점을 해체함으로써, 외화획득, 생산과 무역의 결합, 원자재, 원료 문제의 자체 해결 등 탈냉전기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김일성은 “다른 나라와의 합병, 합작은 다른 나라에서 기술과 자금을 대게 하고 기업관리는 우리가 하는 방향에서 하여야 하며 될수록 많은 리운을 얻도록 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합니다”³⁰⁾라며 외국인 직접 투자와 이에 따른 경영권 보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소위 우리 식대로라는 김일성의 개방 인식은³¹⁾ 그 실패의 원인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 즉 제국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외인론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경제난국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북한은

28)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4호(1992), 30쪽.

29) 『민주조선』, 1992년 2월 26일.

30) 김일성, “현 시기 정무원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1992년 12월 14일), 『김일성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6쪽.

31)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1994년 4월 16일), 『김일성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59쪽.

그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고전적 방법으로 해법을 모색한 것이다. 즉, 그들의 자립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에는 오류가 없지만, 자신을 고립시켜 온 미국과 제국주의 세력들 때문에 개방이 가로막히고 경제 난국이 닥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3) 개방 실패의 내인론: ‘라남의 봉화’와 신(新)자력갱생론의 제기

1998년은 북한 체제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해이다. 이 시기 김정일의 경제건설 노선은 1998년의 ‘성장의 봉화’, 2000년의 ‘락원의 봉화’, 그리고 2001년 ‘라남의 봉화’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의 봉화’는 1998년 3월 국방위원장이 함북 김책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한 이후에 나온 구호이고, ‘락원의 봉화’는 2000년 2월 평북 신의주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라남의 봉화’는 2001년 8월 19일 함북 청진시의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이후에 제기되었다.

2001년에 제기된 ‘라남의 봉화’는 기존의 ‘봉화’와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차별성이 있었다. 그 하나는 650톤 프레스를 자체 생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중시사상이 반영된 슬로건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마다 지역 거점 공장들이 주력상품 외에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여러 종류의 설비와 소비품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생산하던 관행을 고쳐 업종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³²⁾ 이는 비효율 타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사고’,³³⁾ 즉 신(新)자력갱생의 실천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2) 『중앙일보』, 2001년 12월 11일.

33) 조동호·김상기, “북한 경제정책 구도 및 향후 경제정책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1년 1호(2001), 12~16쪽.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라남의 봉화에서 제기된 신사고, 즉 자력갱생과 자립이라는 이름하에서 진행되는 ‘저질의 자급자족’에 대한 비판적 계몽에 대한 부분이다. 라남의 봉화를 그린 소설 『열망』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형상화하여, 필요하다면 무조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자립이 아니라 실리를 타산해 수입할 것은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기하고 있다.

난 비서 동무나 기사장 동무가 자력갱생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졌으면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력갱생이라는 이름 밑에 저마끔 전극, 브이벨트, 카바이드, 베어링하면서 그 생산기지를 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력갱생하여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는 데서도 오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래일까지 생각해야 하며 공장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가적인 범위를 반드시 넘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을 꼭 고려에 두어야 합니다.³⁴⁾

김정일의 업적을 그리고 있는 지도자 형상 소설 시리즈인 ‘불멸의 향도’ 총서의 하나인 『라남의 열풍』 역시 동일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

34) 김문창, 『열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57쪽.

김문창의 『열망』은 1999년작이지만, 라남의 봉화는 2001년 말에 제기된 것이다. 이는 『열망』을 통해 형상화된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의 모범이 채택되면서 전국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라남의 봉화는 라남기업소의 모범이 『열망』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된 후, 김정일이 2001년 11월 러시아 방문 후 귀국길에서 본 공장을 들르면서 2001년 말부터 제기되고 특히 2002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확산·제기된 것이다. 반면 강계정신의 경우 1998년에 강계 정신이 대중운동의 구호로 제기된 이후 소설 『강계정신』으로 형상화된다. 라남의 봉화와는 역순으로 된 것이다. 소설 『라남의 열풍』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드라마 열망에 대해서 평하는 부분이 나온다. 드라마 열망은 부분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다며 라남의 모범을 전면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라남의 봉화가 제기·확산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다. 백보흠, 『라남의 열풍』, 465쪽.

다. 2004년작으로 비교적 최근작인 이 소설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을 빌려 ‘새로운 자력갱생’에 대한 교시를 던진다.

우리 식과 자력갱생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속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일군들이 우리식과 자력갱생을 잘못 이해하여 경제를 맡아먹고 나라를 망신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의 자력갱생과 1990년대의 자력갱생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질이 나쁜 제품을 자체로 창안 제작해놓고 자력갱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력갱생을 비속화하는 것입니다.³⁵⁾

소설들이 형상화한 당시 상황의 실제 모습을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자력갱생하는 것은 자체로 조건을 마련하여 나라에 더 큰 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그런 것만큼 나라에 손해를 주는 줄 뻔히 알면서 전국을 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할 수는 없다. 자체로 조건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나라에 손해를 주는 것은 우리당이 강조하는 자력갱생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하기에 그는 ‘자력생산기지’로 자랑 높은 전국생산기지의 불합리성을 대변 알아내고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명처방’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라남사람들 속에서 일명 ‘전국기지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문제 해결이 던져준 충격은 작지 않았다.³⁶⁾

동일 제품을 반복 생산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자력갱생의 이름 아래 모든 제품들을 자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다소 자원의 낭비가

35) 백보흠, 『라남의 열풍』(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217쪽.

36) 『로동신문』, 2002년 1월 21일.

있더라도 지방별로 자체 생산할 것은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 체제의 자립론, 즉 전통적 자력갱생론이었다. 그러나 라남의 봉화가 제기된 이래 자력갱생론은 지역 단위가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효율적인 규모의 경제를 꾀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국가의 리익, 전 인민경제적 리익을 실현하는 데 복무하지 못하고 경영손실을 내는 그 어떤 경제활동도 자력갱생으로 될 수 없다”³⁷⁾라는 주장은 1990년대의 자력갱생론이 과거 지역 단위의 자급 체제를 중복적으로 건설하는 1960년대식의 경제건설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전 국가 단위의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또한 라남의 봉화는 과학기술과 실리를 강조하며 대외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장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무역이라는 공간과 통로를 리용하여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기계, 기술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자력갱생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당정책”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들³⁸⁾은 확실히 과거에 비해 실리와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변화이다. 소비재의 수입이 인민생활 향상에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다음 글은 라남의 봉화 이래 점증해 온 실용주의를 확인해 주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 특히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품을 다 자체로 생산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실리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오늘 우

37) 길춘호,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원칙 구현,” 13쪽.

38) 정상훈, “무역을 통한 선진 기술이 생산성에 주는 영향에 대한 고찰,” 『경제연구』, 2004년 1호(2004), 27~29쪽.

나라의 전력 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세계시장에 흔한 값싼 소비품까지 다른 나라에서 원료, 자재를 사다가 국내에서 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전력이나 장비하였지 리득을 볼 것은 없다.³⁹⁾

이 같은 원칙의 변화에 따라 북한 체제는 경공업 제품 지표를 대폭 줄여 필요한 것, 실리가 보장되는 것만 자체로 생산하고 그 밖의 생활 필수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⁴⁰⁾ 기업 단위에서도 부족한 원료, 연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정상화 묶으로 규정된 생산할당량의 일정량을 외국 무역을 통해 팔아 연료와 원료를 사오는 것까지 허락하고 있다.⁴¹⁾

이로써 자력갱생은 과학기술과 실리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모든 것을 자체로 한다고 하면서 맨손으로 두드려 만들어야 자력갱생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 것이 진짜 자력갱생입니다.”⁴²⁾라는 김정일의 거듭된 교시는 지난날의 자력갱생론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그만큼 낡은 방식의 자력갱생에 익숙한 하급 단위의 관행들을 변화시키고 신노선을 정당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39) 최영옥, “사회주의 대외무역에서 수입구조의 개선,” 『경제연구』, 2004년 2호(2004), 34쪽.

40)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3년 4호(2003), 35쪽.

41) 김영일,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족되는 원료, 연료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3년 2호(2003), 26쪽.

42) 김정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함경남도의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288쪽.

북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과 자립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또한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나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라남의 봉화로 시작된 신자력갱생, 곧 ‘오늘의 자력갱생’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선전은 북한 체제의 개방관, 즉 대외관계에 대한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난국의 원인이 외부의 봉쇄뿐만 아니라 체제 내부의 경직성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내부로부터 변화의 동력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신자력갱생을 통한 자립과 개방의 ‘새로운’ 공존: 정권(regime) 독립의 수단으로서의 개방

북한 체제 담론에서 불변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개념으로서의 자립관이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독립’ 문제가 모든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 지위(priority)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사회주의 체제들에서 개방, 즉 상호의존 개념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수단으로 출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체제전환 과정(process)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개방과 상호의존론에서 불변의 요소는 분명하다. 개방, 곧 ‘상호의존’ 문제는 여전히 수단적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상호의존은 독립의 하위 수단일 따름이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 나라의 독립과 통일이라는 명제이다.⁴³⁾ 상호의존도의

43) 경제 모델로 볼 때 이는 북한 지도부가 개혁의 목표로 수출 자체를 위한 수출 체제, 즉 수출주도 산업화 체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수단을 국내생산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공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세

증대는 독립이라는 명확한 상한선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북한 자립론의 지고지순의 제1법칙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자립과 개방 개념, 곧 독립과 상호의존 개념에 변화는 없는가?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독립 개념의 범주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여타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러했듯이 북한도 2002년의 7·1 조치 이후 큰 폭의 경제 시스템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스탈린식 몰량 공급제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변화는 경제 관리 분야뿐 아니라 유통, 가격, 재정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그 폭이 매우 크다.

북한 체제가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 국민국가 체제의 ‘독립’을 고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경제발전전략의 변화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2003년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기존의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으로부터 “국방공업 우위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으로 전환하였다.⁴⁴⁾ 북한 정권이 과거와 같이 중공업 일반이 아니라 특별히 국방공업을 지칭하여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구대로라면 이는 군수공업의 강조를 의미하겠지만, 북한 담론의 맥락적 이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중공업의 분화와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곧 중공업을 국방공업 부문과 기타(민수) 부문으로 구분하여 안보 문제와 직결된 국방공업 부문 이외의 중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고 그에 투입되던 자원을 경공업, 농업 등 소비재 부문으로 전

계시장을 겨냥한 규모의 경제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 지도부 스스로가 그어놓은 한계점이다.

강철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2004년 2호(2004), 4쪽.

- 44) “선군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2003년 3월 21일; 정문산,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은 선군정치 실현을 물질경제적으로 담보하는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 『근로자』, 2004년 1월호(2004), 31쪽.

환하겠다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 지도부는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는 국방공업과 민수생산으로 이루어져 있다”⁴⁵⁾라고 정의하면서, 국방공업을 “군사적 목적에 리용되는 모든 물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군사적 목적에만 전용으로 쓰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 각종 무기와 탄알,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부문”⁴⁶⁾으로 최소화시켜 정의내리고 있다. 이 같은 최소주의적 정의에 기반해서 국방 부문을 민수 부문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민수 부문의 확장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화를 시작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경제를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부문으로 이분해 온 마르크스의 견해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선군시대 재생산이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군수생산 부문과 생산수단생산 부문, 소비재생산 부문으로 3분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⁴⁷⁾ 국방공업을 특수한 독립 경제 부문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재생산 연계에서 국방 부문의 독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공업 우위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은 경제의 3개 부류, 즉 국방공업 부문, 생산수단 부문, 소비재 부문 중 국방공업 부문 이외의 2개 부문 소위 민수 부문에서는 소비재 부문을 생산수단생산 부문보다 우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개 민수 부문에서는 생산의 ‘독립’보다는 ‘상호의존’, 즉 대외연계와 개방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중공업의 위력은 “강철공장의 굴뚝에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며,⁴⁸⁾ 국방공업

45) 김원국,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4년 2호(2004), 9쪽.

46) 위의 글, 8쪽.

47) 심은심, “선군시대 재생산의 몇 가지 리론문제,” 『경제연구』, 2004년 2호(2004), 11~12쪽.

48) 장철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하신

이외 중공업 부문은 생산수단의 자체 생산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립을 고집하지 말고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효율을 도모하라고 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한발 나아가 최영옥은⁴⁹⁾ 민수 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제기하며 맹목적 자립경제노선을 비판하고 있다. 소비품이나 사다 쓰는 관점에서 대외무역을 할 것이 아니라 “수입무역에서 생산수단의 수입을 기본으로 할 것”을 전제로, “현대적인 설비를 들여올 때에는 일식으로 들여와야 한다. …… 기계 설비를 일식으로 들여오지 않는다면 이빠진 공정을 갖추게 되며 이것을 자체로 완비하는 데는 많은 자금과 로력이 들어가게 된다”라며 기존의 수입 관행을 비판하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라는 그녀의 주장은 그래서 자립과 개방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경제를 3개 재생산 부문으로 재분류하고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이 “국방공업 우위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으로 전환한 것도, 사실은 경제를 국방공업과 민수경제로 양분하고 정권과 안보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국방공업이 보존된다면 나머지 민수경제에서는 과거와 같은 낡은 자립과 구(舊)자력갱생 개념을 고집하기 않겠다는 시그널인 셈이다.

이 점에서 북한 지도부가 의도하는 ‘독립’의 주체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 국민경제, 즉 ‘전통적 자립적 민족경제’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와 같이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국민국가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의 ‘체제’ 독립 개념은 침식되었고 이를 지도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립’의 주체는 국방과 안보 레짐으로

불멸의 업적,” 4쪽.

49) 최영옥, “사회주의 대외무역에서 수입구조의 개선,” 33쪽.

대표되는 김정일 정권⁵⁰⁾ 그 자체가 아닐까?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7·1 조치 이후 시작된 변화를 필두로 한 전 방위 개방의 영역이라는 분석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5. 결론: 진화하는 자립과 개방 인식의 향배

북한 체제에서 가장 자립적인 인자들이 누구보다도 충실한 체제 구성원들이었지만, 7·1조치 이후의 ‘실리’시대에 와서 그들은 자립성만 큼이나 비효율적이고 뒤떨어진 사람들이 되고 있다. 체제수호의 전위대가 되어야 할 인자들이 개혁과 개방의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할 경우, 선군식 정권 유지와 체제 개혁이라는 두 토끼몰이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식 개혁과 개방노선에서 미래의 한계는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두 토끼몰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개방 의식은 가장 정교한 정치사업의 영역이고 대중선동의 영역이다. 개방 의식의 변화는 북한 체제 변동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독립 개념의 선차성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 ‘독립’의 주체는 과거와 같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system)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과 선군 체제(regime)이다. 이를 전제로 북한 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 방위의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이 “국방공업 우위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으로 전환한

50) 물론 북한에서 ‘정권’ 독립의 문제 역시 간단히 볼 부분은 아니다. 단지 김정일의 개인 권력을 유지하는 문제로 환원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 유지라는 것이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갖는 역사적 정당성과 선군정치를 통해 드러나는 현존 기득 세력들의 이해관계 유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것도 사실은 경제를 국방공업과 민수경제로 양분하고 정권과 안보 독립을 위한 국방공업이 보존된다면 나머지 민수경제에서는 과거와 같은 낡은 자립과 자력갱생 개념을 고집하기 않겠다는 시그널인 셈이다.

따라서 사실상의(*de facto*) 개방 경로를 시작한 북한 체제가 직면할 문제는 상호의존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통제능력을 벗어날 경우의 상황이다. 개방, 즉 전 방위 상호의존이 북한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는 정권 차원의 안보와 독립을 침식시키기 시작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선택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국가 차원을 넘어 기업·사회 차원의 상호의존이 활성화될 경우 반드시 정치 체제의 독립성에 영향을 준다는 근대화론적 결론이 북한의 자립 개념을 제약할 경우, 북한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점이야말로 북한의 개방 노선이 풀어야 할 숙제이고 또한 독립 개념을 통일 개념과 연관 지어온 북한 체제의 이데올로기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자립 개념의 수정 과정, 즉 지금까지 정리해 온 독립과 상호의존 개념의 변화가 개방 의식의 만개와 체제변동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한 지도부가 의도하는 변화가 관리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지 않고 선부른 결론을 내리기엔 선행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역사나 경험이 너무 일천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 지도부의 대중 선동과 통제력이 만만치만은 않다.

■ 접수: 2월 20일 / ■ 채택: 3월 7일

참고문헌

<북한 문헌>

1) 단행본

김문창, 『열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백보흠, 『라남의 열풍』(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전기』,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2) 논문

강철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2004년 2호(2004).

강현재, “라남의 봉화는 새 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확고한 담보”,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3년 4호(2003).

길춘호,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원칙 구현”, 『경제연구』, 2005년 2호(2005).

김영일,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족되는 원료, 연료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3년 2호(2003).

김원국,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4년 2호(2004).

김일성,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금속공업을 발전시키데 대하여”(1986.2.5~8), 『김일성저작집』, 제3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1994.4.16), 『김일성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_____, “현 시기 정무원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1992.12.14), 『김일성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정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함경남도의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3년 4호(2003).

리신호,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4호(1992).

심은심, “선군시대 재생산의 몇 가지 리론문제,” 『경제연구』, 2004년 2호(2004).

정문산,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은 선군정치 실현을 물질경제적으로 담보하는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 『근로자』, 2004년 1월호(2004).

정상훈, “무역을 통한 선진 기술이 생산성에 주는 영향에 대한 고찰,” 『경제연구』, 2004년 1호(2004).

최영욱, “사회주의 대외무역에서 수입구조의 개선,” 『경제연구』, 2004년 2호(2004).

3) 신문

『로동신문』, 2002년 1월 21일.

『로동신문』, 2003년 3월 21일.

『민주조선』, 1992년 2월 26일.

<국내 문헌>

1) 단행본

백학순, 『베트남의 개혁, 개방 경험과 북한의 선택』(성남: 세종연구소, 2003).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서울: 선인, 2005).

스즈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서울: 중심, 1999).

쟁하스 저, 한상진·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 나남, 1995).

퇴경연구실 편, 『현대사회주의 경제의 쟁점과 전망』(서울: 풀빛, 1991).

2) 논문

권오윤, “북한에서의 경제발전과 정치변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동국대 대학원 연구논집』, 23권 12호(1993).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세계체제의 영향,”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서울: 황금알, 2004).

요한 갈통, “자력갱생의 정치학,” 엄홍철 편저, 『종속의 극복』(서울: 풀빛, 1983).

이수훈, “베트남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Vol. 10. No. 2(1994).

조동호·김상기, “북한 경제정책 구도 및 향후 경제정책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1년 1호(2001).

황재호, “중국의 개혁개방: 현대화의 딜레마,” 『동서연구』, 제15권 1호(2003).

3) 신문

『중앙일보』, 2001년 12월 11일.

<국외 문헌>

1) 단행본

Nikolai Schmelev and Vladimir Popov, *The Turning Point: Revitalizing the Soviet Economy*(New York: Doubleday, 1989).

2) 논문

Alexander Eckste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Vol. XXII, No. 4(1970).

Christopher Davis and Wojciech Charemza, “Introduction to models of disequilibrium and shortage model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hristopher Davis and Wojciech Charemza, eds., *Models of Disequilibrium and Shortage in Centrally Planned Economies*(London: Chapman and Hall, 1989).

Franklyn D. Holzman, “The Significance of Soviet Subsidies to Eastern Europe,”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28, no. 1(1986).

Matthew Evangelista, “스탈린의 보복-국제화를 가로막은 제도적 장벽,” Robert O. Keohane and Helen Miller, ed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6), 김기석 외 역, 『국제화와 국내정치』(서울: 한울, 1999).

Paul R. Gregory and Robert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1990), 한종만·우강업·김성형 역,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경제의 구조와 전망』(서울: 열린 책들, 1992).

Robert O. Keohane and Helen V. Milner, ed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6), 김기석 외 역, 『국제화와 국내정치』(서울: 한울, 1999).

Susan Shirk, “국제화와 중국의 경제개혁,” Robert O. Keohane and Helen Miller, ed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6), 김기석 외 역, 『국제화와 국내정치』(서울: 한울, 1999).

North Korea's Open Door Policy and New 'Self-Reliance' Campaign

Jung-Chul Lee(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order to achieve rapid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s top leadership has had no choice but to begin reinterpreting its excessively politicized 'self-reliance' discourse.

Before Kim Il-Sung's death in 1994, North Korea insisted that its self-reliant socialist system had nothing to do with autarky and thus that the frustrations of its open door policy resulted from external interference.

However, it appears that this perspective did not offer a sufficient means for overcoming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its socialist system. As long as North Korea attributed its underdevelopment to the U.S. containment policy, there was no way to solve the internal problems in its own system.

The Ranam factory campaign, so called the ‘Torch of Ranam’, was proposed in 2001 and is based on a newly reinterpreted concept of self-reliance from an economic efficiency point of view. This campaign may not only be the signal of a new open door policy, but also the signal for an economic policy transformation with the introspective acknowledgment that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originated from within.

Deserving of our attention, then, is North Korea’s new self-reliance campaign, which itself implies that everything but the North’s security regime could be transformed.

Key Words: North Korea, open door policy, self-reliance, Torch of Ranam or Ranam Factory Campaign, Autarky

필자 약력(계재순)

이정철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1991) 같은 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2002). 주요 논저로는 “북한의 경제발전론 재론: 1960년대 경제조정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2002), “북한의 신농업정책: 농업국영화논쟁과 토지정리사업을 중심으로” (2003), “북핵의 진실게임과 사즉생의 선군정치”(2004),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 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 과제”(2005) 등이 있다.